



조간 제 8186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음력 9월 4일)

‘30년 숙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 차질

긴급진단 <상> 전남광주 북부권 행정서비스 난망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 4만512㎡ 부지에 건축
자재비 급등에 82억 증액했지만 여전히 35억 부족
청사 규모 줄여 내년 상반기 착공... 준공 2년 지연

전남광주 북부권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청사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데다 준공 시점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가량 늦춰지면서 운전면허 행정서비스 개선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은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 4만 512㎡ 부지에 운전면허시험장과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찰청이 주관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며,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수탁해 추진하고 있다.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한 이후 전남과 광주 지역에 서로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시험장은 나주와 광양 두 곳뿐이었다. 이 때문에 전남 광주 주민 184만명(지난해 기준)의 75%에 해당하는 광주 시민 138만명과 전남 북부권 주민들은 면허 취득과 갱신 등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370억원을 투입해 추진됐다. 2021년 부지 선정과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11월 착공했지만, 토지 매입 과정의 수용재결과 연약지반 보강 등이 공사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건비와 건설자재비가 상승하면서 사업비 8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증액분은 2025년 말 예산에 반영됐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452억원으로 늘었다.

당초 옛 광주시는 운전면허시험 기능뿐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시험·평가 기반까지 구축한다는 구상을 내놔다. AI 모빌리티 인증센터를 비롯해 정보기술 기반 운전면허 평가시스템과 가상환경 평가시험장, 자율주행차 시험·평가 체계 등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을 연계한 기술인증·시험·평가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증액된 82억원 가운데 79억원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분이며, 나머지

3억원엔 AI 모빌리티 인증센터 설계비다.

그러나 사업비 증액 이후에도 공사비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기자재 조달과 물류 차질 등이 이어지면서 추가로 35억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예산처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조달청의 시설계약 적정성 검토 절차가 진행됐다.

설계 변경에 따라 본청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에서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낮아진다. 연면적도 당초 4018㎡에서 3035.4㎡로 982.6㎡ 줄어든다. 전체 연면적의 약 24.5%가 축소되는 셈이다. 관련 예산 역시 210억원에서 175억원으로 감소한다.

준공 시점도 당초 올해에서 2028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해 말까지 본청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 요청을 진행하고, 관계기관의 업무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착공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착공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부지 평탄화 작업은 지난해 10월 완료됐으며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전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건축공사는 설계 검토와 발주 절차가 끝나야 시작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건설공사비 지수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사업 규모를 조정하게 됐다”며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1급지 규모와 기능을 유지할 예정이며, 연간 행정 처리 건수도 30만 건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백일홍 꽃밭에서 느끼는 가을 풍경 13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주 영산강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핀 백일홍 사이에서 사진 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기진 기자 bluesky@gwangnam.co.kr

롯데 광주월드컵점, 이달 말 새 주인 찾는다

20년 임대계약 내년 1월 만료...계약기간 5년 계획
연 임대료 감정평가 진행...롯데쇼핑 입찰 참여 예정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의 20년 임대 계약 종료로 앞두고 새로운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이 이달 말 추진될 전망이다.

연간 45억8000만원으로 유지돼 온 임대료가 감정평가를 거쳐 새롭게 산정될 예정이다. 가운데 최고가 입찰 방식이 적용될 계획이어서 입찰 결과에 지역 유통업체의 관심이 쏠린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인 아웃렛의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입찰 사전 준비 단계로, 이달 말 입찰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입찰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는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입찰은 롯데쇼핑이 20년간 운영해 온 광주월드컵점의 임대계약 만료

에 따른 것이다. 롯데쇼핑은 2007년 1월부터 광주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을 임대해 아웃렛을 운영해 왔으며, 기존 계약은 2027년 1월 만료된다.

기존 계약에 따라 광주시는 월드컵경기장 내 토지 5만7594㎡와 건물 1만 8108㎡를 롯데쇼핑에 유상 대부했다. 당시 연간 임대료는 45억80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롯데쇼핑이 재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9289㎡로 제한됐다.

이번 입찰의 핵심은 새 임대료와 계약 조건이다. 최고가 입찰 방식이 적용될 예정인 만큼 감정평가 결과와 참여 업체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새 운영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입찰 조건을 마련하고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 유통시장 환경 변화도 입찰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신세계그룹의 광천터미널 복합화사

업과 어등산관광단지 스타필드 조성사업,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복합개발 등이 추진되면서 지역 대형 유통시설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주거단지와 향후 개발 계획은 상권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반면 신규 유통시설과의 경쟁, 입찰에 따른 임대료 상승 가능성은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부담으로 꼽힌다.

롯데쇼핑은 기존 운영 경험과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이번 공개경쟁입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광월드컵점은 오랜 기간 운영해 온 곳인 만큼 이번 공개경쟁입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며 “입찰 공고와 세부 조건이 확정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변 대형 유통시설 개발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입찰 참여 업체들은 임대 조건뿐 아니라 향후 상권 변화와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 자원회수시설 공모에 9곳 신청

5개 자치구 의견청부 시에 제출...입지선정촉 개최 예정

광주광역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입지 재공모가 13일 마무리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달 중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 평가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각 개인·법인·단체로부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접수한 광주권 5개 자치구는 현지 여건, 주민 동의 여부, 법적 적합 여부 등을 1차 심사한 결과와 그에 따른 검토 의견서를 이날 시에 제출했다.

지난달 12일 자치구 단위 신청 접수 결

과 광산구 5곳, 서구 2곳, 남구 1곳, 북구 1곳 등 모두 9곳이다.

시는 접수된 자료들을 토대로 응모 적격 여부 등 실무적인 검토를 거친 후 조간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자치구가 신청 접수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평가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미경 통합특별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치구로부터 후보지를 접수받아 자치구 1차 의견이 반영된 서류를 검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며 “이달

안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인 평가 대상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30년 ‘직매립 금지’ 법 시행에 맞춰 광주권 쓰레기 처리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연내 후보지 선정과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4차 공모마저 무산되면 시가 소각장 최적 부지를 직접 지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지역에는 법적 지원과 특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외 우수 사례를 참조해 미관 상 아름답고 주민 편의 기능을 두루 갖춘 ‘랜드마크’로 설계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기금도 신설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초대석



서삼석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생산비조차 보전 어려운 농업
'구조적 한계' 돌파해야"

초대석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위원장

"전남광주 대전환 기회
경제 대도시 열어나갈 터"

전통에 현대를 더하다



홍윤진 루트마스터(주) 대표

"전통에 현대 더해
지역 문화유산 콘텐츠로"

시대공감



윤형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도시재생과장

"도시를 바꾸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

2026.10 vol. 161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전남광주의 10월은



문득여행



커버스토리

임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인문도시를 넘어 AI 경제도시로 대전환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미래 다시 그린다

인구증가·인문도시·문화관광 등 성과 토대
민생 중심 행정·SI 헬스케어 미래 동력 육성
노포 맛집 발굴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박차

전라도人

2026. 10 vol. 161

